

여야정협의체에 정의당 참여 야3당 난색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서 합의 정의당, 민주당 우군 역할하며 국정 적극 협력...야3당 부정적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수평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 난관이 남아있다. 정의당의 참여 여부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이 정의당 참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여야정협의체는 지난 5월 19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 합의된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각 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은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청와대와 여야가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여야정협의체를 상설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하자 여야는 화답에 나섰다. 회동이 끝나고 청와대는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의 동기가 있어 실무협의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려고 (회동) 들어갔는데 대통령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다"고 대답할 정도로 사전에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였다.

여야정협의체는 인사청문회, 추가 경정(추경)예산안 등으로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기 시작했다. 야3당이 단일대오를 이루고 국회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협치와 소통은 어려워졌다. 자연스럽게 여야정협의체도 관심에서 멀어졌다. 추경과 정부조직법 등이 타결되면서 다시 여야정협의체 구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여전히 난관은 남았다. 비교섭단

체인 정의당 참여를 두고 여야 입장차가 존재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야3당이 정의당 참여에 부정적"이라면서 "부득이할 경우 민주당과 야3당,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가 본격 가동되겠지만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3당은 현재 '3대 1' 구도를 '3대 2' 구도로 만들기 싫은 모양이다. 표면상 이유는 정의당이 비교섭단체기 때문에 함께하기 어렵다고 말

한다. 20석조차 되지 않는 작은 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긴 어렵다는 뜻이다. 속내는 조금 다르다. 정의당은 그동안 민주당의 우군 역할을 하며 국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취했다. 정의당이 구성원으로 들어와 여당의 손을 들어주면 야3당의 반대가 '국정발목잡기'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야3당의 입장에서 정의당을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포함해야 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민주당도 정의당을 포함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아니다. 어렵게 조성된 여야정협의체 논의가 어그러지는 것은 피해야 하는 것이다. 추경예산안 등 처리를 두고 야3당에게 단단히 혼란 민주당 입장에서 여야정협의체는 반드시 필요한 기구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정협의체가 가동되기 전까지 야3당이 정의당을 반대하면 아무래도 (참여)가 어려울 것 같다"며 "8월까지 설득해보고 안되면 우선 가동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중태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해초 여야정협의체는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회동에서 제안한 것"이라며 "정의당이 대선에서 다른 당 못지않은 성과를 낸 것이나, 현재 지지율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문 대통령의 제안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정협의체의 결말이 궁금해진다.



정우택 "박근혜 재판 생증계? 프라이버시 보호 의무 있어"

"장제원 징계 가능...판단 쏠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등 25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사건의 TV 생중계가 검토되는 데 대해 "물론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재판을 받는 분의 인권적인 문제 또는 개인적인 여러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건 한마디로 사법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가 알기로는 대법원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상고 심에서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계를 작년인가 재작년엔 허용했다"며 "그런데 1, 2심은 허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우리의 마지막 사법 기능의 최후의 보루"라며 "사법부가 올바르게 재판이 이뤄지고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인권도 존중하는 측면에서 이뤄져야 하고 이것이 오히려 잘못 흘러서 사법 포퓰리즘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정처개입 의혹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데 대해서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게 확실하다 하면, 국정원의 본래 기능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며 "그건 비난받을 수 있고 그게 법에 어긋난 것이라면 위법행위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하필 지금 이 시점 그걸 제기하는 문제. 또 이게 현재 재판

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고의적 행위라면 그것의 정당성은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에 찬성표를 던진 장제원 의원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당헌당규에는 그렇게(징계 가능) 돼 있다"며 "당론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추경안에 반대하기로 한 당론에 대해 다른 행동을 한 의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론되는 건 당연하다"며 "단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는 어제 홍준표 대표가 좀 더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자 했고, 판단의 문제는 당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대표에게 일임해 달라"는 뜻으로 애길 했기 때문에 이견 홍대표의 처리에 맡기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원위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중세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는 "협의체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다"며 "중세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었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난 뒤 혼선이나 장기간 시간이 걸릴 경우 협의체가 논의하는 것"이라며 "(바로 협의체를 만들 거라면) 국회가 왜 필요한가, 협의체가 다 처리하면 그만이지"라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건 한마디로 졸속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라며 "졸속 원전 중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게 문제라는 걸 지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MB조사 주장하는 與 정치적으로 이용 오해 낳을수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관련 "차분히 법원 판단기대려야"

바른정당은 25일 여당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 요구하자 "여당이 자꾸 나서는 모습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사안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일부에서 벌써부터 과도한 해석으로 이명박 대

통령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뒷선' 개입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만일 법원에 의해 위법성이 확인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고 그때 가서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보이지 않도록 차분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국민의당, 내일 단일 지도체제 전환 '결론'

다음달 27일 당대표 등 선출 위한 전당대회 열기로 의결

국민의당은 오는 27일 운영위원회 열어 단일 지도체제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다음달 27일 당 대표 등을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김관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등) 선거를 8월27일에 하기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달) 27일 중앙위원회 소집이 됐다"며 "그날 오전 11시에 지도체제 관련해서 최종 결론이 나면 우리(선관위)는 그날 오후 2시에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도체제와 관련해서 "결론

이 실질적으로 내일(26일)까지 나와야 한다"며 "그래야 내일 모레(27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태일 혁신위원장은 17일 기존 지도체제인 최고위를 폐지하고 당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를 꾸리자는 혁신안을 내놨다.

집단지도체제 성격을 갖고 있는 최고위원회보다는 한명의 강력한 대표 체제로 지도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당 내부의 개혁 작업을 심도 있게 추진해 현재의 위기를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당내 찬반이 엇갈리지만 직접적 이해당사자 격인 당권주자들은 대체로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김윤호 기자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이입니다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